

투데이 칼럼

우리 사회가 납득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대통령책임제라는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5개국 중 미국, 멕시코, 칠레, 한국뿐이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유사 이래 사실상 중앙집권제만 알아 온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각 주별 분권국가이므로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 겸 국가원수로서 재임중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심각한 법률위반의 경우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탄핵은 법률행위라기 보다 정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를 결의하면 그 재판은 대법원이 아닌 상원에서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치가 50명의 생애를 기록한 플라타르크의 "Parallel Lives" (한국어로는 영웅전으로 번역, 2천여년 전 저술)는 워낙 방대해서 쉽게 읽을 엄두가 안나는 책이다.

오랫동안 쌓아만 두고 읽지 못한 수천권의 책을 읽어 보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들기도 한다.

근래에 어쩌다가 플라타르크의 50명 인물중에서 그리스 정치가 9명의 전기만 수록한 "Greek Lives" 가 눈에 띄기에 지하철 타는 시간을 주로 이용하여 읽고 있다.

옛날에 좀 읽은 그 인물 중에서는 Pericles 정도만 좀 기억이 되는데 나머지 들어 읽어보니 대단한 지혜가

담긴 책임을 실감하게 된다.

군사국가 스파르타의 기초를 세운 Lycurgus, 아테네의 민주적 제도를 만든 Solon,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유명한 Salamis 해전의 영웅이었으나 아테네에서 쫓겨난 후에 페르시아에 귀의하여 잘 살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은 Themistocles, 소크라테스의 애제자로서 플라톤의 저서에도 등장하는 그야말로 칼라플한 인물인 Alcibiades,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등의 얘기가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 책에는 탄핵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도편추방제도(陶片追放制 ostracism, 그리스어로는 오스트라키스모스 Ostrakismos)가 자주 등장한다. 이 제도는 당시 그리스 도시국들인 아르고스와 시라쿠사에서도 실시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아테네의 오스트라키스모스였다.

원래 독재자(참주 tyrant)의 재권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민주정이 도입된 BC 508년 이후인 BC 487~BC 48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추방은 당시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없고 보통 10년인 시효(時效)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추방자의 결정은 이른 봄 민회(民會)에서 오스트라키스모스 시행의 가부(可否)를 거수로 결정하고 아고라(광장 Assembly)에 모여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도편(陶片; 오스트라콘)에 기입하는 비밀투표를 하였다.

총 투표수가 6천명을 넘으면 유효투표가 되어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추방자가 결정되었다고 하고 6천표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추방되었다고 전하나 확실한 정설(定說)은 없다.

이 제도는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주(僭主)와는 관계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참주 = tyrant, 고대 아테네에서 귀족정치가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이용하여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독재권을 행한 자들로서 후대에 들어서는 '폭군'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는 참주의 경우 참주장이라는 과도기가 오히려 민주정치로의 전진 요소였음)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유명한 장군들이인 아리스테이데스, 테미스토클레스, 키몬과 알키비아데스 등도 그 희생자였다. BC 417년 이후 이 제도는 사라졌다고 한다.



최병호
주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역임

근래에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투표에 사용된 인명을 기입한 도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그 중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플라타르크는 이 제도는 독재자가 등장할 것을 우려한데서 기인하였기 보다는 아테네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권세가 센 정치가를 일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Ostracism was a measure designed to placate people's envy rather than any possible fear, they periodically employed to curb the most outstandingly popular and powerful man in the city and send him into exile. This form of punishment had never before fallen on anyone unimportant and obscure." Alcibiades편, "Parallel Lives" by Plutarch)

이는 매우 흥미 있는 관점인데 현대 서양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의(justice)와 평등의 개념이 바로 이 시기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시기심(envy)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데서 기인하고 질투심(jalousy)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다. 어찌 보면 시기심은 분배의 정의, 질투심은 기득권의 수호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듯하다.

(계속)

사설

전북도민 평균 소득 전국 꼴찌

호남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다. 도민의 소득이 전국 최저라는데 그렇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내다본 까닭이다. 그만큼 공평한 전북이라는 인식이 굳어져버렸다 는 고백이다. 그러나 또 다시 전북도에게 경각심을 촉구해야겠다. 소득 최하위는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호남통계청의 반복되는 보고를 기승아파해야 한다.

매년 이맘 때면 발표되는 내용이 늘 동일했다. 그런 까닭에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내다본 이는 어느 한 두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소득이 전국 최저라는 현실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오래도록 전국 최저라고 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극빈자도 여전히 많은 게 우리 전북 지역의 현실이다. 겨울이 깊어가는 이때,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 하는 세대도 적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에게 주고 싶은

말은 저번에 했던 그대로 똑같다. 전북도는 도민의 경제 불행 체감과 관련해 고민해야 한다. 도민들을 위해서 이마를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고민의 주체도 반성의 주체도 전북도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당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살갑게 챙겨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의 빛이 물결 1300조 원이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는 돈을 풀어 금리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이다.

한국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지금이다.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의 지가 약한 터에 앞으로는 그마저도 없어질까 염려이다. 상황이 갈수록 파국을 향해서 치달고 있는데 내년이 걱정이다. 지금 이래로라면 전북도민의 소득이 더욱 심각해 질 게 뻔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어떻게하면 도민의 소득을 끌어올릴지 궁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압박감을 느끼는 가운데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지자체들 부채 현황 공개하라

올해도 하필없이 저물고 있다. 12월의 달력이 하순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동지이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기다리는 지역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짚어볼 게 있다. 지역발전이 더딘 이유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내부에 온존하고 있다면 그걸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면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결과 속을 보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게 정부의 홀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는 해도 전부 다는 아니지않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은 많다. 그것들 중에는 농가 부채도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전라북도는 농도(農道)로 이름이 높음에도 여태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입이 제일 떨어진다며 농사를 지으면 빚만 늘게 된다는 농민들의 호소이다. 그래서 도내에는 부농보다 빈농이 많다.

그러나 더 황당한 쪽은 도내 지자체와 공기업들이다. 오래 전의 보도이기도 한 그 부채 액수의 단위가 조 단위였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다시 또 묻는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부채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다. 엄청난 부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감한 문제이다. 도민들이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갈수록 체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정부의 변화된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 그렇다지만 온전히 공감이 되는 지적은 아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만의 입장을 대변한 거러서 핑계만 같다.

다시 당부하거나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사진을 아무리 그려보어도 내부적으로 무거운 짐들을 진 채 허덕이고 있다면 그 어느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는가. 지자체의 부채가 여전히 지역의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재정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랜 재정난을 외면한 채, 일자리 창출도 외면한 채, 지역 발전 운동은 선풍력 없다.

독자재언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할수록 좋다

힘들었던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고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에 마음까지 얼어 버릴까 염려되는 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2015년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을 발단으로 아동학대가 큰 범주로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밖에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사건', '고성 친할 맘매장 사건' 그리

고 계모의 랍스·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80이 사건' 등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아이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양수범죄로서 그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몸 안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만큼 아동학대 역시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학대의 상처를 하루 빨리 치료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재원으로 자라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학대의 후유증 역시 보다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학대의 피해이름이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이는 곧 사회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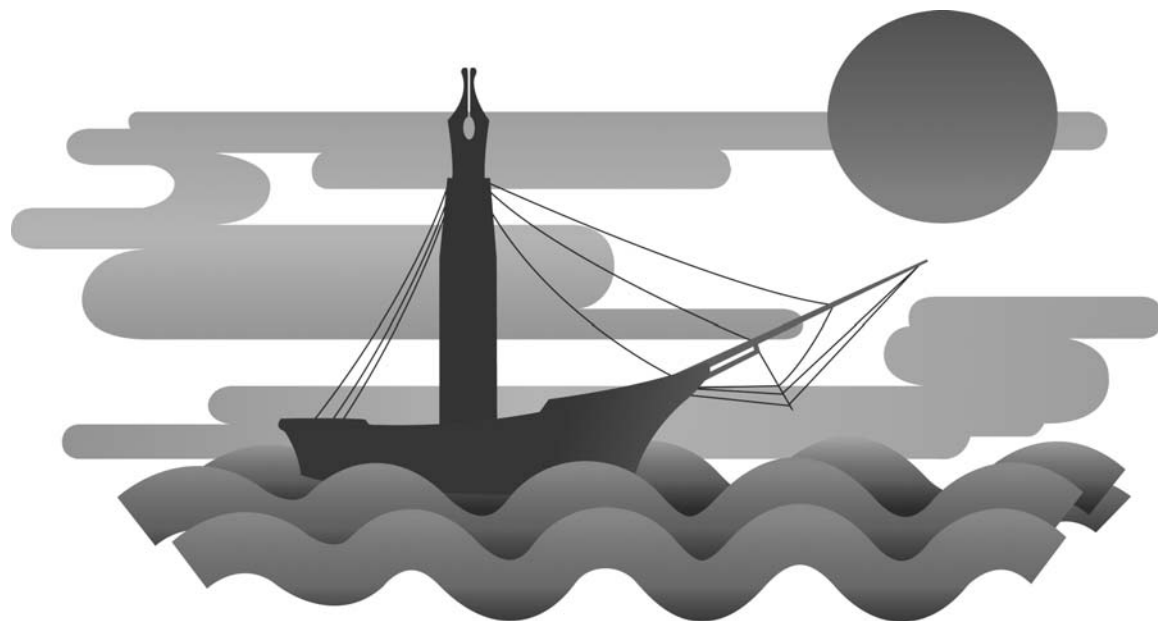
학대받는 아이는 주변에서 누군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고 학대나 폭력 등 점점 강력하고 빈번

한 범죄에 노출될 것이다.

아동학대의 끝은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살인사건이 된다.

살얼음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학대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위를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면 어떨까.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국민들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임수정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